

경제통통

FOCUS

- 서울시 전국최초 생활임금 시행, 올해 시급 6,687원으로 확정
- ‘공공일자리 신 모델’ 뉴딜일자리 1,387개 시민에게 제공

ZOOM IN

- ‘취약계층 노동자 집중지원’ 서울노동권익센터 문열어

HOT ISSUE

- 인터넷쇼핑 1회 지출, 해외직구 15만 9천 원, 국내 7만 원
- 금융산업육성조례 제정 시민공청회 개최...금융중심지 구축 ‘밀거름’

PHOTO@NEWS

- 서울시 기술교육원 수료식 /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민생침해모니터링단 위촉식

김가영(서울시 경제진흥본부 gykim@seoul.go.kr)

| 서울시 전국최초 생활임금제 시행, 올해 시급 6,687원으로 확정

서울시는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

• 올해 최저임금 5,580원보다 1,107원(20%) 많아, 월급 환산 시 137만 9,583원

시급 6,687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보다 1,107원(20%)이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 시 월급은 137만 9,583원이다.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3인 가구 평균 지출 값(주거비·식료품비 등)의 50%(평균지출 50% 수준 이하의 삶은 빈곤하다고 가정)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3인 가구 최소주거기준 36㎡의 전월세 실거래자로 중위 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저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

- ▶ 이를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맞벌이 부부 1인: 日 8시간 전일제/1인: 日 6시간 파트타임)으로 나눠 산출한 값(시급 6,582원)에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1.6%)을 반영
(서울시 평균 가구원 수 3인(맞벌이부부 2인+자녀 1인)'기준)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은 박원순 시장의 ‘경제 민주화정책 시즌 2’로, 앞선 정책이 고용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면 생활임금제 도입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를 해소해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올해 1단계로 시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지난해 시급 6,582원을 적용하면 대상인원의 266명이었는데, 2015년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대상인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선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16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 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정책과

| ‘공공일자리 신 모델’ 뉴딜일자리 1,397개 시민에게 제공

서울시가 청년·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뉴딜일자리 1,397개를 3월부터 제공한다.

뉴딜일자리는 과거 취약계층 생계보호라는 사회안전망 역할에 중점을 둔 한시적·임금 보조적 공공일 자리를 개선한 새로운 개념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는 동시에 시민 일자리 제공과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진입을 돕고 있다.

· 사회서비스형 / 경력형성인턴형으로 분류, 청년/여성/장애인 등에 다양한 일자리 제공



참여유형별로 살펴보면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컨설팅을 해주는 ‘서울에너지복지사’, 민생침해 현장을 점검하는 ‘민생호민관’과 같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10개)과 업무역량을 쌓아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력형성인턴형(18개)으로 나눌 수 있다.

대상별로는 청년마케터, 시립미술관 전시큐레이터, 청년혁신활동가 등 청년일자리(600개), 아동시설 아동돌봄도우미 등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여성일자리(200개), 올해 처음으로 모집하는 청각장애인 CCTV모니터링요원과 같은 장애인일자리(12명)가 있다. 이외에도 시민 일자리설계사,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사, 민생호민관과 같은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취업취약계층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585개)도 제공된다.

한편, 서울시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소지자 및 기업체 인사노무분야 경력자로 구성된 ‘뉴딜일자리 매니저’ 12명을 선발해 현장에 배치해 구인기업 발굴 및 취업정보 제공, 직업역량교육 등 참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상담을 실시해 진로설계도 지원한다.

28개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한 모집·선발은 2~4월 중에 사업별로 진행되며, 18세 이상 서울 거주 시민으로 실업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면 기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job.seoul.go.kr, 전화 02-1588-9142) 및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

| ‘취약계층 노동자 집중지원’ 서울노동권익센터 문열어

저임금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 여성·청년·이주노동자 등 스스로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노동권익센터가 문을 연다.

서울시는 종로구 율곡로(운현하늘빌딩 10층)에 총면적 264.46㎡ 규모의 <서울노동권익센터>를 개소하고 노동복지관련 컨트롤타워 및 광역허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노동복지 컨트롤타워이자 광역허브 역할, 노동서비스 전체 자치구로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이미 '11~'12년 문을 열고 운영 중인 구로·노원·서대문·성동구 노동(근로자)복지센터와 통합하는 중앙 차원의 지원기관이다. 이 센터의 개소로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서비스해온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관련 상시적 상담도 전 자치구로 고르게 확대됐고 상주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필요할 경우 노동청 진정사건 대리 등 법률구제 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 사후구제는 물론 시민들에게 노동존중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캠페인, 교육 등 실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노동 관련 지원 기관들이 사후구제 위주였다면 이 기능은 물론 시민참여 노동인권 캠페인, 노동환경개선 등 노동 관련 사전 예방과 교육까지 주력해 노동존중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노력을 다각도로 병행한다는 점이다.

당장 어려움에 놓인 취약근로자에겐 상담을 실시해 해결책을 찾아주고, 이에 앞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높여 나가기 위해 노동인권캠페인 등을 통해 근본적인 노동존중의식을 시민들에게 심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노동복지센터가 없어 교육 등이 어려운 지역은 직접 찾아가 노동 상담을 하고 시민노동법률학교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노동정책과

| 인터넷쇼핑 1회 평균지출, 해외직구 15만 9천 원 · 국내 7만 원

인터넷 쇼핑물 이용자 2명 중 1명은 해외구매, 일명 해외직구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해외구매 1회 지출 비용은 평균 15만 9천 원으로 국내인터넷쇼핑 1회 지출금액인 7만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최근 1년 이내 인터넷쇼핑물 이용 경험이 있는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적을수록 인터넷쇼핑물 이용 경험이 많았으며, 해외직구는 1년에 4회 정도 이용한다는 응답이 19.2%로 가장 높았다.

• 해외직구 평균지출 남성 16만 7,600원 > 여성 15만 5,200원... 의류·화장품 가장 많이 구매

남성의 1회 평균 지출비용은 16만 7,600원으로 여성 15만 5,200원에 비해 약 1만 2,000원가량 많았고, 40대의 평균 지출이 19만 4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구매를 통해 주로 구입하는 상품은 ▲의류·패션관련 상품과 화장품 ▲운동화 등 신발류 ▲식음료 및 건강식품 ▲생활용품·가전 등 통신기기 순이었다. 또한 이용자의 50.8%는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으며, 단점으로는 교환이나 환불절차 복잡(24.1%), 배송지연(26.6%), 반송 시 배송비 부담(15%)을 꼽았다.

• 해외직구 피해 작년보다 44% 증가... 27%가 언어적 문제 등으로 처리 포기

하지만 해외직구의 열풍과 함께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해외구매 인터넷 쇼핑관련 피해신고는 1,154건으로, 2013년 801건에 비해 약 44%가 증가했다. 피해품목은 의류·신발 등 패션관련 상품이 84.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반품 관련이 38.6%(445건), 배송지연이 24.5%(283건), 운영중단·연락두절이 18.5%(213건) 순이었다.

해외직구 피해 소비자 중 64.6%는 구매업체에 연락해서 해결했고, 8.8%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26.6%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처리를 포기했다고 대답했다.



민생경제과

| 금융산업 육성조례 제정 시민공청회 개최...금융중심지 구축 밑거름

지난 2월 6일, 시민, 학계·업계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이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여의도 금융허브 조성 · 산업발전 추진 위해 시민과 전문가 한자리에서 의견 나뉜



서울시는 “그동안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금융산업 발전은 물론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와 집적을 통한 금융중심지 조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여의도를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 조성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한데 모아 완성도 높고 신뢰성 있는 조례(안)를 만들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 여의도에 금융기관 창업 · 외국금융기관 이전 시 고용보조금과 이전 비용 일부 지원

이번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는 금융기관의 유치 및 금융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여의도(금융 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신규 이전하고,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비용은 1인당 월 50만원 이내(최대 6개월)로 신규고용 기관별 2억원, 교육훈련비용은 기관당 6천만 원이다. 또한 외국금융사의 여의도 이전 시 소요되는 사업용 설비설치 필요자금의 10분의 1이내(기관당 10억 원 한도)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 중심지 구축기반 마련을 위한 자문을 수행할 국내·외 금융사 및 학계, 유관기관 등의 민관협의체 금융산업 정책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기술교육원 수료식이 16일, 23일, 25일에 교육원별로 개최됐다. 올해 수료생은 건축인테리어, 의상 디자인, 컴퓨터그래픽디자인, 그린 카정비 등 일반훈련 과정(주간 1년) 1,641명과 야간(6개월) 1,039명 등 총 2,680명이다. 수료율은 95%다. <@일자리정책과>



일상에서 느낀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전문가들이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완성된 아이디어로 만들어주고, 이 아이디어를 다른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인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화-위키서울」이 13일 열렸다 <@사회적경제과>



대부업·임금 체불·취업사기 등 시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행위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적발하는 동시에 예방 캠페인도 펼치는 '민생침해 모니터링요원' 80명이 2월 9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민생경제과>